



자치회비 분배 비율과 타 대학 감사기구 사례

학생자치기구 공금 횡령 논란 계속 대응책 마련 시급해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최근 2주간 3건의 횡령이 발생해 학생자치기구의 공금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호텔관광대학 전 부회장의 자치회비 횡령 ▲피아노학과 전 학생회장의 학생회비 횡령 ▲경영대 선본 후보자의 동아리비 횡령 등이 발생했다. 이에 학생자치기구의 회계 부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감시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감사기구’가 제시되기도 했다. 우리신문 또한 수차례에 걸쳐 감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보도했지만 여전히 관련 기구의 부재와 함께 횡령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금 횡령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거론돼왔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단과대 학생회별 공금운영 공개 여부도 제각각이다. 정경대학, 생명과학대학 등 일부 단과대 학생회는 자치회비 결산안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단과대 학생회도 존재했다. 학생회는

앞다퉀 자치회비와 학생회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납부를 독려하지만 정작 예·결산안을 공개하지 않아 납부 당사자인 학생들은 자치회비의 사용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결산안 공개에 대한 학생자치기구의 입장

예·결산안을 공개하는 단과대 중 정경대 학생회는 각 회기마다 정경대학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치회비 예·결산안 심의 및 인준을 진행하고 예·결산안에 대한 첨부 자료를 속기록과 함께 게시하고 있다(네이버 카페). 이호경(사회학 2018) 정경대 학생회장은 자치회비 횡령 문제에 관해 “예·결산안, 특히 결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정경대 자치회비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은 자치회비 결산안을 월별로 홈페이지

에 게시하고 있다. 김다은(무역학 2018) 서울캠 부총학생회장은 “자치회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공금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당 과정을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언급했다. 국제캠 퍼스(국제캠) 총학은 자치회비 결산안을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의 인준 과정 외에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완주(일본어학 2015) 국제캠 총학생회장은 “확운위로의 예·결산안 인준 과정이 일종의 공개 절차”라며 “별도의 요청이 있다면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학생 자치활동 내에서의 문제 학교와 교육부 관여할 수 없어

학교와 교육부에서도 관련 문제에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자치기구 자체가 학교로부터 엮매이지 않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치회비 또한 그 권한을 학생회에 위임하고 학교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의 경우 지난 2015년 각 대학에 학생회비의 회수와 사용에 관한 문제점들을 짚어 공문을 보낸 이력이 있지만, 이 또한 학교 개입에 관한 강제성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부분 대학에서는 자치회비 관리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자체 감사하거나 정기적으로 예·결산안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학생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로 인해 학교의 개입이 적은 상황에 더해 자치기구 내 관련 체계도 개선이 어려워 횡령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다.

타 대학 학생 감사기구 설치 재정 운용 감사하기도

자치회비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이 점차 악화되면서 ‘감사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 임원으로 구성된 감사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공금 운용의 관리·감독에 힘쓰고 있는 대학도 있다. 송실대학교의 경우 중앙감사위원회(중감위)를 설치해 학생자치기구가 학생회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다. 중감위는 재학생에게 ▲회계교육 자료 ▲회계지침서 ▲증빙자료 ▲송실대학교 감사시행세칙을 공개하고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정기 및 상시 감사를 통해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투명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감사위원회(감사위)를 설치해 ▲총학생회의 각 위원회 ▲특별자치기구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졸업준비위원회 ▲단과대학 학생회를 감사한다. 송실대 중감위와 마찬가지로

로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국대학교도 감사소위원회(감사소위)를 설치해 총학생회 관련 건은 중앙감사소위,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관련 건은 각 단과대의 감사소위를 통해 감사하고 있다.

양 캠퍼스 총학 공금운용 관련 개선책 모색

이와 달리 우리학교의 경우 감사기구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으나 총학 차원에서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울 부총학생회장은 “자치회비 사용단위의 법인화를 권고하고자 학생회 법인화 및 법인통장 개설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학생자치기구를 위한 재정 운용 가이드라인도 제작하고 있다”며 “2학기 이전으로 재정 운용 관련 교육의 대상 범위도 넓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캠 총학은 ▲학우 참여형 회계감사시스템의 정상화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월별 자치회비 사용 내역 공개 등 학생자치구에 관한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다양한 계획을 구상 중이다.

국제캠도 대응 의지를 보였다. 전 국제 총학생회장은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으나 최근 사건을 계기로 공금 운용에 관한 논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현재 부재 상태인 재정 운용에 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공금 운용에 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임원 교육이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 총학만 해왔던 확운위로의 인준 및 보고 과정에 단과대나 학과 내 자치기구의 참여도 보장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학생자치기구와의 신뢰를 전제로 학생회비를 납부해 온 학생들 또한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일부는 감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호관대 재학생 A씨는 최근 발생한 횡령 사건들에 대해 “학생들의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인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 투입돼 마땅한 조치를 취할 학생감사기구가 필요한 것 같다”며 “감사기구의 임원으로 선발된 학생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체계를 통해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학생자치의 또 다른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